Yeosijae

여시재 - 협력연구기관 공동 기획

ISSUE BRIEF

트럼프 제조업 부활 공약 분석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제조업 되살리기 공약 실현 여부

2017. 04. 16

고주현(연세대 EU 센터)

Future Consensus Institute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America First Manufacturing Plan)'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건 등 소위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대표되는 미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드인 USA'를 확대하기 위해 채찍과 함께 당근을 동원하고 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 국내로 되돌리게 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이전을 초래했던 세금과 규제는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는 미국 내 일자리 우선(US Job Priority) 정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경조정세(BAT) 도입, 이민 통제, 인프라 투자 확대, 기업투자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려는 국경조정세는 법인세의 일종으로 과세 기준을 생산지가 아닌 최종 소비지로 전환하여 기업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의 핵심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 친화적(Business-Friendly) 환경 조성이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세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 해외 보유 기업수익의 국내 송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 만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셋째는, 미국 이익 우선(America First)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TPP, NAFTA 등 기존 무역협정의 폐기 및 재협상을 추진하고, 중국 등 對美 흑자국에 대해서는 무역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이전 및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NAFTA 등 불리한 무역협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산업 기반이 강해지고 세계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도 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경조정세 도입과 보호무역정책을 통한 트럼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의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미 제조업 고용 감소의 진정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첫째, 트럼프의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전통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이므로 제조업 부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사라진 미 제조업의 일자리 대부분이 기업들의 해외이전(off-shoring)보다 공장자동화 등 기술진보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둘째,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 정책은 미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악영향을 주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 기업들은 광범위한 국제 분업을 통해 가격경쟁력과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미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생산성이 낮은 자국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일예로, 현재 보잉사가 미국(사우스 캐롤리나)에서 조립하는 최첨단 항공기인 드림라이너(Dreamliner)의 부품 대부분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일본 등에서 조달되는데, 해외생산 부품이 항공기 전체 원가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잉사가 국제 분업에 의존하는 이유는 내구성이 강한 양질의 부품을 국내보다 해외에서 공급받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교육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근본 정책이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메이드 인 USA' 정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교역 상대국에 피해를 줄 경우, 교역 상대국들도 WTO 제소 등 對美 보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중국, EU(특히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게 되면 미 제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국경조정세(BAT) 도입은 교역상대국과의 마찰은 물론 미국 내 산업(기업) 간에도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수출 기업들은 대규모 감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형 유통회사 등 수입업체들은 20%에 이르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수입은 줄고 미국산 제품의 소비와 수출이 촉진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490억 달러로 전체 GDP의 4%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넷째,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인하 등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으로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통화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달러 강세가 초래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메랑 효과가 예상된다.

앞에 나열한 이유들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국 중심의 제조업 되살리기 공약은 말처럼 쉽게 실현되기 어려우며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